

사회적경제기업 규제 · 애로 신고서

<p>성명</p>	<p>-</p>	<p>연락처</p>	<p>(전화번호) - (이메일) -</p>
<p>제목</p>	<p>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협동조합 대상 시·도지사의 해산 처리 권한 관련</p>		
<p>규제애로 사항</p>	<p>() 일반협동조합의 경우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70조의2에 따라 시·도 ↳ (참고) 규제애로사항 관련 법령</p> <p>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.</p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9c4; padding: 5px;"> <p>1. 최저 발기인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.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.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</p> </div> <p>(애로사항) 다만,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수 발생하는 사례로 ‘설립 신고 수리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’ 임. 위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더라도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권 한은 시·도지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임.</p> <p>또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3조 제2항에서는 타 협동조합과의 명칭과 중복되는 협동조합을 사용할 수 없음.</p> <p>(애로사례) 이러한 법령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로 신고수리상태에 머물러 있는 협동조합이 다수 있으며, 신규 설립 신고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 발생 ↳ (참고) 규제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받는 애로 사례</p>		
<p>건의사항</p>	<p>(개선이유) 일반협동조합의 관리·감독에 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부여하여 신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필요</p> <p>(개선안) 신고 이후 오랜 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에 대해 시·도지사 가 업무의 시정 및 조치를 명령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. ↳ (참고) 규제애로 개선안 및 개선이유</p> <p>신규협동조합은 명칭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,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시·도지사의 관리·감독 권한을 넓혀 올바른 협동조합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</p>		

붙임3

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주요 사례

사례① 디지털 도어록 주전원 종류 규제 합리화 추진 산업부(일부수용)

- (현황) 디지털 도어록은 안전기준상 주전원을 건전지(또는 어댑터)로 규정*하여 2차전지(리튬폴리머 등)를 활용한 제품 개발·출시 곤란
 - * UL인증과 미국 표준협회 기준에는 배터리 종류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, 배터리 종류에 관계없이 전자제어장치에 관한 기준(충격에 대한 기준 포함)을 만족하면 됨
- (개선) 소비자안전을 위한 요구성능 만족을 전제로 디지털 도어록 주전원 기준을 삭제하거나 2차 전지 종류 추가 검토·연구 추진*
 - * 전문가 검토 → 안전기준 개정 타당성 연구용역 →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개정

사례② 소기업 공장 부담금 면제특례 지역범위 확대 중기부(수용불가)

- (현황) 수도권 외 지역 소기업 공장(1천m² 미만) 신·증축 및 이전 시 부담금을 면제*하여 낙후 수도권 지역기업의 불만·부담 상당
 - * (대상)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개발부담금, (시행) '94년~

[현장소리] 수도권이라 하지만 지역여건은 지방과 비슷한데 부담금이 너무 많아!

⇒ 산업기반시설이 없는 양평군에 첨단산업 관련 7개 소기업이 입주할 희망하나, 각종 납부 부담금이 많아 초기 투자비용 확보에 및 기업입지 고민

- (추진) 소기업 공장 부담금 특례를 수도권 내 군(郡) 지역기업도 포함(이전은 제외)하여 관련 부담금 일부 감면 또는 면제

사례③ 소규모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일반숙박업 입지허용 산업부(수용불가)

- (현황) 산업단지(지원시설구역)의 경우 호텔업*과 달리 숙박업(일반) 입지가 불가하여 소규모 지방산단 기업·근로자 불편 야기**
 - * 바이어 응대 등을 위해 허용하나 대규모 산단 이외에는 입주 호텔이 거의 없음
 - ** 소규모 산단은 교통·정주여건이 통상 열악한 지역에 위치, 주거지역 접근성이 낮음
- (추진) 비광역시 등 소규모 산단(일반·농공)에 대하여 기초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어 숙박업(일반) 입지를 허용토록 개선